

안철수 “중재파 합류하면 오는 13일 전대이후 사퇴”

기존 입장 재확인… ‘중재파 합류’ 조건 달아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지난 달 31일 중재파 의원들의 대표직 사퇴 요구에 대해 “함께해준다면 신당이 창당되는 날, 2월13일 통합을 완료시키고 대표직에서 물려 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 밝힌 ‘통합 후 백의종군’ 입장은 재확인한 것이지만 ‘중재파 합류’를 추가 조건으로 내건 것이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이같이 말한 뒤 “제 사퇴가 보다 많은 분들이 통합에 함께할 길이면 기꺼이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당내 친반 갈등을 중재하겠다고 공언한 중재파들은 안 대표를 향해 ‘전당대회 전 사퇴’를 비롯해 2·4 전당대회 ‘통합 의결’ 이후 사퇴 등을 요구

해 왔다.

안 대표는 “통합을 반대하는 분과 끝내 함께할 수 없었고 해어지게 됐다”며 “이 부분은 당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당의 중심을 지키며 중재에 애써준 분들이 있다”며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고 중재파를 치켜세우기도 했다.

안 대표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조건부 사퇴’라는 이야기인가라는 질문에 “지금 중간에 계신 분들이 한 분이라도 더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재파가 통합신당으로 합류하지 않아도 사퇴에 변함이 없나”라는 추가 질문에는 “함께할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사실상 조건부라는 점을 부인하지 않은 것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안 대표가 중재파 전원이 합류하지 않을 경우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유승민 대표와 함께 공동대표직을 맡을 명분을 마련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안 대표는 유 대표의 입장 조율 여부에 대해서는 “이침에 (유 대표에게) 말했다”며 “ 일단 좀 더 깊은 이야기들은 추후에 나눠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중재파 “안철수, 중재안 거부한 것…오늘 입장발표”

“통합대회 끝난 후 당대표직 소멸…사퇴 아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난달 31일 내놓은 ‘통합 동장서 2·13 통합전당대회 직후 사퇴’에 대해 당내 중재파는 “중재안을 거부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1일 적극적 중재파인 박 주선 국회의장, 김동철 원내대표, 주승용 전 원내대표, 이용호 정책위의장, 황주홍 의원은 물론 손금주·송기석 의원까지 모여 항 후 거취를 결정한 뒤 입장문을 발표 할 방침이다.

박주선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 원내대표와 주 전 원

내대표, 이 의장과 긴급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안 대표는) 결국 통합대회까지 대표직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라며 “우리 중재파들이 제안한 안을 거부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통합대회가 끝나버리면 이 당은 법률적으로 소멸되고 대표직이 소멸되기 때문에 사퇴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안 대표의 말은) 통합 이후에 대표직을 맡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한다”며 “이걸 놓고 중재파들과 어느 방향으로 행동 통일을 할

건지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중재파 의원들은 대체로 안 대표의 ‘조건부 사퇴’ 발표에 불쾌해하는 모습이다.

중재파 내에서도 통합파에 가까운 주승용 전 원내대표는 “저희들에게 공을 던져버린 게 아닌가. 그런 건 비범직하지 못하다”며 “안 대표의 결정에 따라 (우리가) 합류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결정을) 해야지. ‘중재파가 합류해 주면 사퇴하고 중재파가 합류 안 해주면 사퇴를 안 하겠다’ 그런 뜻으로 들려 대단히 불쾌하다”고 했다.

뉴스스

유승민 “안철수 조건부 사퇴 발언 안타깝게 생각해”

‘동반 백의종군’ 압박 거세질 전망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는 31일 안 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통합 후 백의종군 입장을 재확인한 것과 관련해 “오늘 안 대표의 조건부 사퇴 발언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도 오늘 오전에 얘기를 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저는 늘 통합개혁신당의

성공을 위해 안 대표와 제가 같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해 왔다”며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안 대표의 사퇴 결정으로 인해 유 대표의 ‘동반 백의종군’ 압박도 거세질 것이라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안타깝다’는 발언 역시 통합신당 출범 초반 양당 대표가 성공적인 연착륙을 이끌어야 한

다고 주장해온 유 대표의 의지와 달리 안 대표가 당 내부 사정으로 인해 다른 선택을 한 데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제 사퇴가 보다 많은 분들이 통합에 함께할 길이라면 기꺼이 하겠다”며 “(중재파 의원들이) 함께 해준다면 신당이 창당되는 날, 2월13일 통합을 완결시키고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말했다.

뉴스스



평창 초청장 확인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오른쪽)이 3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사무실을 찾은 한명도 청와대 정무수석으로부터 전달받은 평창 동계올림픽 초청장을 개봉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한 수석은 평창올림픽 초청장을 이 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했다.

한국당, 지방선거 출마 여성·청년에 최대 30% 가산점

최고위서 당현·당규 개정안 마련…새 인재 수혈

자유한국당이 6·13 지방선거 공천에서 여성과 청년, 정치 신인 등에게 최대 30%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당현·당규 개정안을 마련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적 혁신에 공을 들이고 있는 한국당은 이같은 당현·당규 개정을 통해 새로운 인재 수혈하겠다는 방침이다.

홍준표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은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에는 공직이나 선출직 등에 출마하지 않은 정치 신인이나 여성, 청년(만 45세 이하)에게 각각 경선 득표율의 20%씩 가산점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약 정치 신인이면서 여성·청년이리면 가산점을 최대 30%까지 받을 수 있다.

단 이같은 가산점 부여 방안은 올해 지방선거에 한해서만 적용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또 지방선거 후보 경선 시 일반국민 여론조사와 당원투표 반영 이율을 70%대 30%에서 50%대 50%로 조정하기로 했다.

장재원 수석대변인은 “후보 경선 시 해당 지역 책임당원 전원에게 투표권을 부여해서 그만큼 책임당원에 대한 권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최고위는 이날 회의에서 우선 추천 지역 선정 요건 추가·여론조사 및 모바일 투표 규정 신설, 여성 최고위원 별도 분리 선출 등의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